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2016. 1.

순서

I. 2015년 성과와 반성	3
II. 2016년 정책추진 여건과 방향	9
III. 2016년 주요 업무계획	15
①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관리	17
② 돈이 되는 미래성장산업화	24
③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	33
④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구현	44
⑤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52
⑥ 정책추진 기반확보	59
IV. 주요 정책 현안	63
1. 산림병해충 방제	65
2. 봄철 산불방지	68
<참고1> 2016년 입법 추진계획	71
<참고2>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2
<참고3> 2016년 분기별 추진계획	73
<참고4> 기관 일반현황	75

I . 2015년 성과와 반성

1. 주요 성과

2. 반 성

1. 주요 성과

□ (산림산업) 친환경 산림산업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

○ 불합리한 제도 정비로 산림산업계 경영활동을 활성화

- 입목취득세 폐지로 원목생산업계 조세부담 완화(행자부 협업)

* 입목취득세 2→0% : 원목생산업자 1인당 연간 51만원 세금감면 효과

- 벌기령 완화로 사유림 목재생산량 확대 및 산주소득 증대

* 참나무류 50 → 25년 : 사유림 수확벌채 80%↑, 산주소득 연 286억원↑

- 정책자금 융자 및 보험제도 개선으로 임업인의 경영안정 유도

* 융자 : 4개 사업 금리인하(0.5%p) 및 변동금리 적용 / 보험 : 농업인과 동일혜택 부여

○ 산업계 지원 강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산업을 육성

-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로 국산제품의 품질향상 도모

* 건조·방부설비 개선(30개소) : 원목대비 방부목재의 부가가치 4배↑ 효과

- 정원산업 제도화로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수목원·정원법」 개정('15.7) / 세계정원시장 규모 : 210조원(Market Line, '13)



□ (산림복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

- 「산림복지법」* 제정('15.3)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

*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전문업 등록제, 소외계층 산림복지 지원 등 규정

-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로 메르스 등 관광업계 불황에도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이 증가

*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 ('14) 2,999 → ('15p) 3,100만명 (약 100만명↑)

- 도시녹화운동에 대한 시민·기업 등 민간 참여가 확대

* 민간참여 : ('14) 298 → ('15) 487개소 (63%↑, 예산절감효과 약 100억원)

☞ 「2015 대한민국 정책평가」(동아일보)에서 도시숲 정책이 정부정책 6위에 선정

□ (산림재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획기적으로 저감

- 산불골든타임제 강화로 ‘2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

* 산불피해 : (10년 평균) 631ha → ('15) 418ha (34%↓, 대형산불 제로화)

- 선제적인 취약지역 관리로 ‘23년만에 산사태 없는 해’ 달성

* 산사태 피해 : (10년 평균) 393ha, 6명 사망 → ('15) 산사태 및 인명피해 ‘0’

* 도로변 54개소 사방사업 추진(국토부 협업) → 2년 연속 도로변 산사태 ‘0’



* 산림복지 수혜인구 : 자연휴양림·치유의숲·산림교육시설·수목원 이용객 수(연인원)

□ (해외협력)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강화

- 북한의 요청에 따라 금강산 병해충 피해 긴급지원을 실시
 - * 남북한 산림전문가 공동조사('15.7) 및 방제약제(1톤)·기자재(20대) 지원
- 양자협력 강화와 기업지원으로 해외조림 면적을 확대(' 15까지 39만ha)
- AFoCO* 설립협정문 채택(' 15.9)으로 AFoCO 설립을 가시화
 - * AFoCO(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 차관-국무회의-대통령재가('15.11.25) 완료 및 국회 비준절차 추진중
- 세계산불총회*, 세계대나무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 * 72개국 4,617명 참석, 산불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평창 선언' 채택
 - ** 104만명 참석, 대나무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규제개혁 등) 불합리한 규제와 비정상적인 적폐를 해소

- 임산물재배시 복구비 예치 및 감리 면제, 국유림대부료 부담 완화 등 농림축산업의 경영활동 저해 요인을 해소
-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 산단 내 요존국유림 편입면적 확대 (4→8ha) 등으로 적극적인 산지투자 확대를 유도
- 일본·중국식물로 오해받는 우리 식물(2,645종)의 영문명을 변경·홍보
 - * 사례 : (소나무) Japanese red pine → Korean red pine (광복70주년 기념사업)



2. 반 성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재선충병 신규피해 지역 발생

- 전국 840개 방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로 피해지역의 방제품질은 향상되었으나, 신규 피해지역**이 확산

* 정부·시민단체 합동점검(1,697회), 항공·지상방제 확대(8→12만ha) 등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자체 : ('14) 74개 → ('15) 85개 시·군·구

- ☞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립으로 예찰·예방을 강화하고, QR코드 이력관리제 도입 등 인위적 확산방지에 노력중

□ (목재제품) 목재제품 품질관리 미흡(감사원·국정감사 지적)

- 「목재법」 시행(' 13.5) 초기임을 감안하여 산업계 계도·홍보에 중점을 두어 현장의 관리·단속은 상대적으로 미흡*

*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품목(8개) 중 방부목재·목재펠릿 등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집중 단속을 실시

- ☞ 전문가 합동 단속반 구성 등 품질관리·단속 확대 추진중

□ (수출임업) 임산물의 대외 수출 실적이 저하

- 수출대상국의 경제성장 둔화, 환율변동 등으로 수출액 감소

* 임산물 수출실적 : ('14) 3억 6천7백만\$ → ('15p) 2억 7천만\$ (26%↓)

- ☞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수출임업을 강화할 필요

Ⅱ. 2016년 정책 추진여건과 방향

1. 정책 추진여건

2.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

1. 정책추진 여건

□ (정부) 현 정부 4년차이자, 제20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

○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국민복지 증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각종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부 3.0, 정상화, 협업, 경제혁신, 4대부문 구조개혁 등

□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타결로 기후변화가 핵심이슈로 부각

○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향후 산림 노령화에 따른 탄소흡수량 저하 문제가 대두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산림관리로 국가 저감목표 달성과 국내 산업계 부담 완화에 기여 가능

*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12) : 연 5천5백만톤(국가 배출량(6.9억톤)의 8%)

** 파리협정(제5조) : 온실가스 흡수저장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이행을 촉구

□ (FTA)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

○ 국내 산림산업은 저급 목재제품 생산, 단순재배형 1차산업 위주로 저가형 중국제품 대량유입에 취약한 구조

☞ 고품질·고부가 제품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국·할랄시장을 겨냥한 수출임업 활성화가 필요

□ (융복합) 산업.기술분야간 융복합이 중요한 트렌드로 발돋움

-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복잡.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
- ☞ 산림산업과 ICT.BT, 의료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산림관리.산림복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

□ (일자리)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부족이 경제 활성화를 저해

-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 돌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용절벽에 부딪힌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
 - * 고용률('14) : (청년) 41%, (30~50대) 74~79%, (60대 이상) 39%
- ☞ 산림산업 부문에서 장.단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필요

□ (사회문제) 인구고령화,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인구고령화로 인한 국가재정 악화.미래세대 부양부담 증가와 학교폭력.교실 스트레스 등 청소년 행복 저하 문제가 심화
 - * '14년 기준 OECD 국가 중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고령화 속도 1위
- ☞ 헬스케어 3.0*에 맞춘 산림치유 활성화로 국민건강 증진.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확대로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할 필요

* 헬스케어 3.0 : 평소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건강수명 증진

□ (재해) 기후적·인위적 요인으로 산림재해 발생 우려가 증가

- 봄철 건조한 날씨, 이상기후 증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

* '15년 산불 피해(418ha)는 대부분 봄철에 집중 발생(375ha, 90%)

* 연평균 산사태 면적 : ('80년대) 231 → ('90년대) 349 → ('00년대) 713ha

- ☞ 산림재해의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재해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남북협력) 북한 황폐지 복구 관련 협력사업 재개가 예상

- 남북 산림협력이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우선사업으로 부각

* 남한 : 복합농촌단지(드레스덴 선언), 산림공동관리(8.15 경축사), 종자교류(통준위)

* 북한 : 산림황폐화관리부실 인정, 산림복구전투(대대적 조림) 추진, 우리 측에 금강산 병해충 방제지원 요청, 남북 산림전문가 공동학술연구 추진 등

- ☞ 남북협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준비태세 확보가 필요

□ (해외협력) 녹화 성공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이 증대

- 산림복구 경험·기술의 공유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

- ☞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게 산림분야 ODA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 산림협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필요

* 산림분야 ODA 예산('15) : 112억원 (우리나라 전체 ODA 예산의 1% 미만)

2.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

비 전

임업인에게 **희망**을! 기업에게 **활력**을! 국민에게 **행복**을!

목 표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5대 전략과제

①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관리 [국정과제 12-4, 92-1.3]
②	돈이 되는 미래성장산업화 [국정과제 12-4]
③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활성화 [국정과제 12-4, 111-1]
④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구현 [국정과제 86-5, 111-1]
⑤	세계와 함께 가꾸는 산림 [국정과제 126-3.5]

15대 정책과제

1.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경영 기반 만들기
2. 국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줄이기
3. 해외·북한 산림에서 탄소배출권 확보하기
4.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 만들기
5. 미래사회를 위한 산림산업 만들기
6. 희망찬 산림일자리 갖기
7. 숲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8. 숲에서 몸과 마음 힐링하기
9.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녹색공간 만들기
10. 건강한 산림생태계 만들기
11. 대형 산불발생 막기
12. 산사태 없는 안전한 산림 만들기
13. 세계 산림자원 확보하기
14. 지구촌 산림자원 함께 가꾸기
15. 산림을 디딤돌로 통일에 다가서기

정책추진 기반확보

규제개혁, 비정상적 정상화, 협업, 정부3.0, 4대 부문 구조개혁

Ⅲ. 2016년 주요 업무계획

1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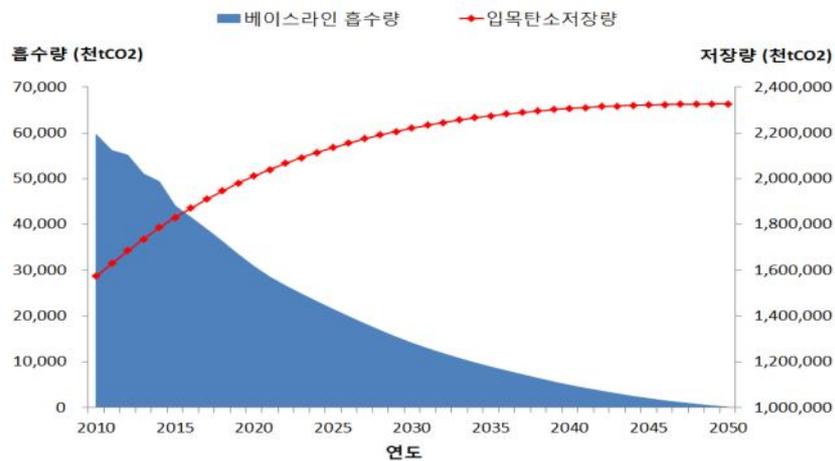
[국정과제 12-4]
[국정과제 92-13]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기여 방안

△ 산림의 노령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급속히 감소할 전망

*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 ('12) 5천5백만tCO₂ → ('50) 10만tCO₂

→ 산림의 영급구조 개선, 벌채조림(수종갱신) 확대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유지·증진하여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필요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예측>

△ 해외·북한 조림사업, REDD+*사업 등의 단계적인 확대를 통해 국가 탄소배출권 확보에 기여 및 녹화 선진국의 위상 강화

* REDD+ : 개도국의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

전략과제 성과목표

-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시나리오 분석 ☞ 흡수량 최대화 방안 도출
- △ 중장기 산림관리 마스터플랜 마련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연구 ☞ 해외·북한 산림 탄소배출권사업 강화

1.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경영 기반 만들기

△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장려하는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자,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①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 수립

- (계획)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행을 위한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2016~2030)」 수립('16.3)
 -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최적화를 위한 영급 구조 개선, 목재제품 이용 등 산림자원의 선순환 관리·이용체계 강화
 - ☞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추가
 - * 파리협정 5조에서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저장원을 보전·증진 활동 촉구
 - 해외조림 중·장기 계획 및 남북 산림협력 계획에 산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협력 추진 방안을 포함
- (협상) 파리 협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내외 협상에 적극 대응
 - 향후 협상 의제별(산림분야 국가감축 기여,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규칙, 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민·관·학 협의체를 활용
 - ☞ 산림상쇄 목표 달성을 위한 유리한 출발지점을 확보

②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산림 연구개발

□ (R&D)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부문별 연구개발을 강화

○ 국내 산림의 탄소흡수 시나리오 분석 및 해외·북한 산림 협력 사업*의 국제 탄소시장 적용 방안 등 연구 추진

☞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 최대화를 위한 시나리오·산림관리 정책대안 및 국가 간 협력 추진 방안 마련

* REDD+ 사업, 해외 사막화방지·조림사업, 북한 산림복구사업 등

○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공유 통합 관리

☞ 적응력 강화로 산림 건강성·저항성 증진과 기후변화 관련 개도국 기술공유·교육 체계화

□ (특별작업단) 신기후체제 대응 산림분야 특별작업단 구성

○ 신기후체제의 산림탄소 감축, 산림생태계 적응, 기술 공유 등 산림분야 대응력 강화를 위한 특별작업단* 구성·운영

☞ 산림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연구·정책·예산의 효율적 수립·이행 기반 마련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분야 외부 전문가 합동 구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마련, 산악기상 관측, 생태계 적응 모니터링, 외부재원 활용방안 마련, 기술교육 등 전담

2. 국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줄이기

①

산림 탄소흡수량 효과적 관리·활용

□ (산림구조) 산림의 탄소흡수량 최대화를 위한 구조개선

○ 목재생산 최적지*를 대상으로 경제림 단지를 재구획

☞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집약경영의 대상 명확화

* 공익임자준보전산자개발예정지 등 제외 : (현재) 292만 → (재구획) 약 200만ha

○ 경제림 단지를 중심으로 벌채·조림 및 산림 SOC를 확대*

☞ 영급구조** 개선으로 지속적인 산림의 탄소흡수량 유지·관리

* '스마트 양묘시스템' 확산(7개소) : 생육환경 자동조절시스템, 시설온실 등
→ 묘목 생산성 제고(5배), 생산기간·비용 절감(50%↓)

* 원목생산 : ('15) 534만m³ (자급률 17%) → ('17) 650만m³ (21%)

* 나무심기 : 온실가스 흡수능력, 목재가치를 고려한 수종 선택(낙엽송참나무류 등)

* 임도시설 : ('16) 전국 임도밀도 3.2m/ha, 경제림 단지 임도밀도 3.8m/ha

** 국내 산림의 영급구조 편중(3·4영급 60%) : 지속가능한 탄소흡수 저해

□ (산림탄소상쇄제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의 시장가치화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공공·민간 참여 지원 및 거래 활성화 추진

☞ 산림탄소흡수량 확대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

* 산림탄소상쇄제도 :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신규/재조림, 산림경영, 목재제품바이오매스 이용)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②

목재이용 확대 및 정책 이행역량 강화

- △ 목재는 생산·이용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탄소를 장기간 고정
(목재가공 시 온실가스 배출량 : 철강의 1/350, 알루미늄의 1/1,500 수준)
- △ 목재 바이오매스에너지 사용 시 목재 1m³은 원유 0.2톤(0.6 CO₂톤 배출) 대체
- △ 제17차 기후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자국산 목재로 만든 목재제품(HWP : Harvested Wood Product) 이용이 국가 탄소계정에 포함

□ (목재) 목재생산·이용 확대로 신기후체제에 대비

○ 국산목재 우선구매제 활성화*로 목재이용 문화를 선도

* 「목재법」 제19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국산목재를 우선 구매 허용

○ ‘목재산업클러스터’ * 조성으로 국산목재의 지역 내 소비 유도

* 지역 내에서 원목생산 - 제품가공 - 소비 및 재투자까지 순환되는 체계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확대 및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 강화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수 : 주택용 3,000대, 사회복지용 100대, 산업용 7대

* 목재펠릿 공급량 : (‘15) 8.2 → (‘16) 9.4 → (‘20) 41만톤(원유 1백만배럴/년 대체)

☞ 국산목재 이용 촉진,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량 증대

□ (역량) 산림탄소 흡수·HWP 이용 정책의 제반역량을 강화

○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운영 및 목재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산림탄소전문가 양성, HWP 이용량의 탄소계정 반영 기반 마련

3. 해외·북한 산림에서 탄소배출권 확보하기

△ 파리협정 5조에서 개도국의 산림황폐화방지(REDD+) 활동 이행을 촉구

①

해외 산림분야의 탄소흡수 협력 강화

□ (REDD+) 현행 REDD+ 사업의 탄소배출권 사업화를 추진

- 양자협력 4개국*에 실행 중인 프로젝트 단위의 산림황폐화 방지(REDD+) 사업을 지역·국가단위 사업으로 확대**

* REDD+ 사업을 시행중인 양자협력 4개국 : 인니,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프로젝트 단위의 REDD+ 사업은 주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국가 단위 추진 시에만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인정

- REDD+ 사업을 국제 탄소시장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 파리협정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탄소시장 이외에도 양자 협력국 간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될 다양한 형태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

□ (국제기구) 탄소배출권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GCF, GGGI*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자금 활용 추진

☞ 개도국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협력 증진 및 사업규모 확대

* GCF : Green Climate Fund(녹색기후기금, '13년 설립)

* GGGI :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글로벌녹색성장기구, '12년 설립)

②

남북 산림·기후변화 협력 확대

△ 북한은 파리 총회 당시 산림황폐지 복구로 기후변화에 기여할 것을 천명

□ (정책기반)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

○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협력방안을 ‘북한 산림복구 기본계획’에 반영

☞ 북한의 산림 건강성 증진 및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 북한의 산림복구 계획·관리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고위급 발언 등을 토대로 볼 때, 산림사업의 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
- * 기존 산림복구 협력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한 협력으로 확대

○ 산림협력 시범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단계별 추진방안 수립

- * 복구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대상지는 남한의 산림과 유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관리 협력

□ (인프라) 남북 협력 산림복구 준비 및 국제기구 활용

○ 종자 공급원·저장시설 조성 및 국제·민간기구 협력 추진

☞ 산림종자 추가 지원 및 남북협력에 필요한 대외자금 확보

- * 대북지원 전용 양묘장 조성('16 본공사 착수) 및 종자 채취(연간 5톤)
- * 북한의 산림복구에 유엔기후협약 하의 기금인 GCF, GEF(국제환경기금) 등의 활용 가능성 검토 및 협력 방안 마련

전략과제 성과목표

- △ 목재·청정임산물 부가가치 제고 ☞ ‘산림산업 GDP 2조원’ 증대
- △ FTA대응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 ‘임산물 수출 5천만\$’ 증대
- △ 산림일자리 대책 성과제고 ☞ ‘창년, Active Senior 등의 일자리 2천개’ 창출



1.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산림산업 만들기

①

‘생산지 ~ 식탁까지’ 산업활동 지원·육성

△ FTA시대의 중국산 수입증가에 대비한 국산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시급

* 對중국 임산물 수입액 : 17억 4천만\$ ← 수출액(6천만\$)의 28.4배('14)

□ (산업) 국내 산림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

○ 임산물 생산기반을 규모·집약화*하고, 친환경 재배를 강화**

☞ 규모의 경제 확대 및 국산 임산물의 청정이미지 제고

* 임산물 산지별 작물생산단지·복합경영단지 확대 : 72개소(176억원)

** 친환경 방제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임업인 지원 : 132억원

○ ‘목재 KS 표준’ (430개 품목, ’ 15.7월 산업부에서 이관)을 전면 재정비하고, 품질검사·표시의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 *를 도입

☞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관리 유도를 통해 시장여건에 맞는 목재제품 품질관리 기반 마련 및 소비자 알권리 신장

*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검사표시(검사기관 의뢰에 따른 기간비용부담 완화)

○ 낙후된 국내 목재·청정임산물의 유통구조를 현대화*

☞ 국내산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진 및 생산·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구매편의성 제고

- * 산지종합유통센터 확대(96→130개소) : 임산물 주산지별 유통의 중심지
- * ‘임산물종합정보센터’ 개원(여주) : 임산물 전사·홍보, 먹거리·레시피 개발 등
-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개선 : 국내 임산물의 유통정보 실시간 제공
- * 대형유통망을 통한 임산물 판로 확대(하나로마트·아마켓(농협), aT 거래소 등)

○ 산양삼 품질·유통관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확대

☞ 국산 산양삼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 품질기준강화(DDT 0.01→ 0.001mg/kg 이하), 불법유통 산양삼 신고소 개설 등

**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15.11개관) 운영 : 산양삼 전사·홍보·교육 전담

○ 임산물 소득자원 신제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확대

☞ 국산 임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산주소득 증대

* 유실수 품종 육성, 특용수밀원수 품종 개발, 산채·산약초 재배기술 개발

* 밤나무 ‘대광’, 표고 ‘백화향’, 헛개나무 ‘풍성1호’ 등 우수품종에 대한 경영임가 보급·확대(’15년 55품종 → ’16년 60품종)

○ 국산 임산물의 소비처를 개발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

☞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하는 국산 임산물 이용 활성화

- * 농협 학교급식 내 지역 청정 임산물 식재료 활용 및 공동마케팅 추진
- * I LOVE WOOD 캠페인 : 목재이용의 효과 홍보 및 체험재능기부형 이벤트 실시

□ (경영지원) 임업인 교육·재해관리 강화로 경영활동을 지원

○ 임업인을 위한 임산물 재배·경영 교육·컨설팅을 강화

☞ 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

- * 지역별 임업인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 지역대학민간교육기관 등 대상 공모
- *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의 복무평가교육 규정 제정 : 경영지도의 전문성 제고

○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인상 및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지원

☞ 실효성 있는 자연재해 대응으로 임업인의 경영안정성 제고

- * 단가인상(머루, 다래, 산양삼 등 13개 품목), 재해복구비(20억원)

○ 임업보험 제도·상품 개선, 홍보·교육 강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

☞ 피해 후 조속한 임업경영 복귀 및 신체상해 보장성 제고

- * 임산물 : 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등 5개 품목 운영 및 오미자 시범사업
- * 임업인 :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 농업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혜택 제공

②

6차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단순재배형 임업의 6차산업화로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임가소득('14) : 31,058천원(농가대비 88.9%, 어가대비 75.7%)

□ (2차산업) 규모화·현대화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영세·노후화된 목재산업계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청정 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가공사업 활성화**를 지원

* 목재생산시설 현대화(제재건조방부시설 51개소),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2개소)

** 청정임산물 기능성·식품 소재화 R&D 추진(밤만주, 감식초 등 브랜드화)

□ (6차산업) 임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청정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6차산업 단지화' *를 추진

☞ 생산·가공·체험 등 클러스터화로 산업영역 확장 및 부가가치 창출

* 6차산업화단지 운영 모니터링·평가(2개소) : 뽕은감(청도), 대추(군위)

* 6차산업화단지 확대(7개소) : 지리산 향노화산업(함양), 밤(공주)·대추(보은) 등

-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지역특화 6차산업화 방안을 추진

☞ 임산물 생산지와 산림·휴양시설·지역명소 등을 연계*하고, '꾸러미 관광상품' ** 등을 통해 방문 유도(지자체·여행사 협업)

* 장성 치유의 숲(연 21만명), 인제 자작나무숲(가공시설·숲교육 접목, 연 11만명)

** 백제도읍 관광지와 연계한 밤 재배수확 체험의 패키지 여행 시범사업 실시(공주)

③

수출임업 육성

△ 대규모 임산물 수출이 가능한 중국·할랄 등 거대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

* 농식품시장 규모 : 중국 1.2조\$, 할랄시장 1.3조\$ (전세계 농식품시장의 35%)

□ (수출경쟁력) 임산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여건을 개선

○ 주산지별로 수출특화지역*을 육성하여 임산물 수출 거점화

☞ 수출용 장비 공동이용 등으로 투자비용 절감 및 규모화

* 수출특화지역 : '16년 영동(표고), 부여(밤) 2개소 추가 육성(총 5개 지역)

○ 수출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 수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대상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 글로벌 GAP·할랄인증 등 해외인증 및 잔류농약위생검사 지원 등(8억원)

□ (시장개척)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유망품목 마케팅을 강화

○ 신시장을 개척하고, 비교우위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지원

☞ 중국, 할랄시장에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추진

* 유망시장 정보조사제공 : 중국(조경수분재), 할랄시장(식품포장디자인)

* 해외시장개척단 운영(10회), 중국·할랄시장 내 안테나숍 운영(2개소)

* 시험수출 지원, 홍보관 운영, K-Food Fair 등 박람회 참여(농식품부 협업)

* 유망품목 발굴(산양삼대추 등) 및 패키지형 지원(제품개발-해외진출-정착)

2. 미래사회를 위한 산림산업 만들기

①

첨단 산림산업 육성

△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생명산업 육성 필요

* 세계 생명산업 시장규모 : ('15) 352조원(美 Global Industry Analysts 추정)

△ 급증하는 산림복지수요를 산업화로 연계하여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필요

□ (생명산업) 생명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소재산업화 추진

○ 산림약용자원연구소('16.5설립)를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연구·산업화 기반시설과 통합 라이브러리를 단계적으로 구축

☞ 생명산업 연구 활성화와 원재료 공급을 위한 플랫폼 창출

* 시설 : 상설재배시험지(양구수원충주) 운영, 식물정유은행 설치(향료자원 조사), 산양삼 종자공급단지 조성('18까지 50ha, '22까지 총 수요량의 50% 공급)

* R&D : 융·복합기반 첨단기술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술개발(30억원)

→ ('17) CR단지(Creative Resources, 종자공급원) 조성,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 (힐링산업) 정부주도형 산림복지서비스의 민간산업화 추진

○ 민간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델개발 연구**를 추진

☞ 다양한 힐링산업화 모델창출 및 민간투자 의욕 고취

* 전문업 등록제 도입·프로그램 유료화, 사유 휴양림 산지전용신고 의제 등

** ICT 융복합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 개방형 산림치유환경 정보시스템 개발 등

○ 산림치유·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힐링산업화 시범사업*을 실시

☞ 힐링산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치유의숲 프로그램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 등

②

미래 삶터, 산촌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산림산업

△ 귀농귀촌 증가와 연계하여 산림산업을 통해 산촌경제의 활력제고 필요

* 귀농귀촌 세대원(누계) : ('12) 47,322 → ('13) 56,207 → ('14) 80,855명

□ (산촌경제) '주민주도형 산촌경제 활성화' 를 추진

○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중·장기 산촌정책을 재설계

* '전국산촌기초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18~'27) 수립

○ 산촌생태마을협의회 주관 하에 '주민현장학교' *를 지원(8개소)

☞ 산촌 활성화를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

* 마을리더 육성, 마을사업 개발, 주민 갈등관리, 마을간 정보공유의 장으로 육성

○ 산촌마을별 6차산업화 계획을 컨설팅하고, 차등지원*을 실시

☞ 산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구적 노력·분위기 유도

* 계획 평가 → 등급 구분(4단계) → 지원규모 차별화(총 20개 마을)

□ (귀산촌) 귀산촌인을 산촌경제를 주도할 임업인으로 육성

○ 귀산촌인·희망자를 대상으로 '산촌미리살아보기 캠프' * 운영

☞ 귀산촌 관심 제고 및 조기·안정적인 산촌 정착 유도

* 단순체험에서 임산물 재배실무·6차산업화까지 단계별 교육(1일~2주일이상)

○ 농식품부 협업을 통해 귀농-귀산촌 정책의 시너지 창출

* 산촌캠프 이수시, '귀농창업·주택구입' 지원 조건(귀농교육 100시간) 인정

* 임업진흥원 '쿨센터' -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인력·정보교류 실시

3. 희망찬 산림일자리 갖기

△ 청년·노년층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 필요

- * 고용률(14,%) : (청년) 41%, (30~50대) 74~79%, (60대 이상) 39%
- * 향후 10년간 임업의 고용성장률은 4.8%로 전체 평균의 약 5배(12, 고용부)

①

친환경 청년직업, 'Young Forester' 육성

□ (인력양성) 취업률 100%의 젊은 산림현장 인력을 양성

○ 'Young Forester' 육성의 요람, 산림 특성화고*를 지원**

☞ 졸업생들의 수목원, 산림사업 현장 등 산림일자리 진출 유도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등 2개교

** 현장 실무형 교과과정 개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기계장비 무상임대 등

○ 인턴-기업간 자율매칭방식으로 젊은 해외산림인턴*을 파견

☞ 중·장기적으로 국제산림분야를 이끌어갈 특화인력 양성

* FAO, ITTO, 몽골사업단 등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 해외산림개발 사업체 파견

□ (일자리창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산림일 자리를 창출

○ 기후변화·정원산업 등에 대비한 전문가 제도 도입을 추진

☞ 산림탄소관리사, 나무의사 등 새로운 유망 전문직 창출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산림보호법」개정추진 중

②

‘Active Senior’ 를 위한 산림 일자리 창출

□ (자격취득) 취미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시니어 일터를 제공

- 생활 속 목공예에 전문성을 부여한 목공지도사를 양성하고, 권역별 목재문화 체험시설·프로그램*을 운영

☞ DIY 수요를 일자리로 연계 및 국산목재 이용 촉진

* 목재문화체험장(시설) : 15개소 / 목재체험교실(프로그램) : 20개소

- 산림교육전문가*의 활동영역을 유관분야**로 연계·확대

☞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족 및 산림복지전문가 일자리 안정화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 취득자(8,530명)

** 자유학기제(교육부), 방과후학교(여성가족부), 보호관찰청소년(법무부) 등

□ (일자리) 장년층에 적합한 공공·민간·사회적 일자리를 확대

- 장년적합업종(고용부 선정, '15)인 산림재정사업* 일자리를 지속운영

☞ 취업취약계층의 민간 일자리 이동을 위한 디딤돌 기능 수행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등

- 산주·산림일자리 희망자를 산림경영인·임업기능인으로 양성

* 전문임업인(산림경영인) 확대(7,900 → 8,400명), 임업기능인 교육훈련(1만명)

- ‘시니어 고용·창업 활성화 사업’ *을 추진(한국임업진흥원 활용)

* 시니어 대상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일자리 매칭 및 창업 지원 등

전략과제 성과목표

- △ 인프라 프로그램 강화 ☞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인원 200만명’ 확대
- △ 산림복지바우처 도입 등 ☞ ‘소외계층 1만명 무료서비스 혜택’ 제공
- △ 도시녹화운동 확대 등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2배(0.28m²/년)’ 확대



1. 숲을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 국내 어린아·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 OECD 국가 중 최하위(‘10~’14)

①

유아의 감성을 터치하는 숲체험

□ (숲태교) 태아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증진

○ 치유의 숲, 도시근교 산림을 활용한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신세대 주부들의 수요를 충족

* 숲태교 수혜 인원 : (‘15) 1,030명 → (‘16) 1,500명

* 숲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는 무력감, 불안감, 공격성 등 정신적 지표와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졸, cortisol) 농도가 의미 있게 감소(인제대 백병원)

□ (유아숲체험) 유아들의 전문적인 산림체험 기회를 확대

○ 유아숲체험원을 확충(35→43개소)하고, 민간위탁운영*을 추진

☞ 유아의 창의성·오감발달 및 새로운 민간 산업화 유도

* 산림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사회적기업 등 활용(4개소)

○ 유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산

☞ 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유아숲체험의 효과성·신뢰도 제고

* 유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 보급('16.1) 및 정기점검 시행(분기별)

** 교육인증 프로그램(50개) 공유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운영 유도

□ (교육전문가) 산림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산림교육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등급제** 도입방안을 연구

☞ 전문성·자질 향상을 통한 산림교육서비스 품질제고

* 숲해설가 6,834명, 유아숲지도사 936명, 숲길체험지도사 760명 등

** 단일 등급 → 1·2·3급 : 산림교육전문가 전문성 제고 및 능력별 업무 세분화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체험원

②

청소년 행복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산림교육

□ (협업교육) 청소년 대상별로 차별화된 숲교육을 실시

○ (교육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교실 스트레스 해소, 진로 탐색 및 인성함양 효과 창출

* '식물학자 되어보기'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직업체험 기회제공(300개교, 3만명)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기본계획' 내에 산림교육이 포함

○ (법무부) 학교폭력 등에 관련된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 취약계층 교육·힐링 기회 제공 및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

* 수혜인원 : ('15) 582명 → ('16) 1,200명, 중장기 프로그램화로 교육효과 제고

□ (인프라) 산림교육센터를 산림교육의 구심점으로 활용

○ 권역별 센터 확충(4→8개소)* 및 지도자 양성·정책 개발 등 전담

* 조성 완료 4개소(횡성·태안·부산·장성), 조성 중 4개소(양평·청주·완주·청도)



식물학자 되어보기(자유학기제)



보호관찰청소년 숲교육

2. 숲에서 몸과 마음 힐링하기

△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수요 급증 : ('13) 2,761 → ('14) 2,999 → ('15p) 3,100만명

①

체계적인 산림복지 구현, '산림복지진흥법'

□ (복지법) 새로운 「산림복지진흥법」(' 16.3 시행) 시대를 개막

- 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전문업 등록제·산림복지단지 도입 등 「산림복지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이행

☞ 법 시행 초기에 각종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유도

* 하위법령 제정, 산림복지진흥원 운영 인력·예산 확보 등

- 새로운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야영장*을 도입하고, 산림휴양 시설 안전관리**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

☞ 최신 휴양트렌드 반영 및 안전하고 올바른 산림휴양 유도

* 산림 내 야영장 허용,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불법산지전용 야영장 양성화 등

** 합동모의훈련(경찰소방병원), 안전진단(공립 10개소), CCTV확충(국립 60대)

*** '산림은 그대로, 휴양은 제대로' 캠페인 추진('15~'17, 국민서명 200만명)

□ (소외계층) 여건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

- 산림복지바우처 제도* 시행 및 소외계층 숲체험교육** 실시

☞ 누구나 불편함 없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에게 산림복지시설 이용권(10만원 이내) 제공 : 9,100명

** 여가부(저소득층 방과후 아카데미), 기업(정몽구재단) 등과 협업 추진

②

새로운 형태의 산림복지, '산림레포츠'

□ (산림레포츠) 산림 내 다양한 레포츠 문화를 활성화

○ 산림레포츠 시설*를 확대하고, 지역시설과 연계**를 강화

☞ 변화하는 국민수요 충족 및 민간산업화 기반 마련

* 복합산림레포츠시설(문경·군위·함양) :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제공

** 산림레포츠용 테마임도(600km) 및 산악승마 연계형 특화휴양림 지정운영 등

○ 다양한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로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

* 산악스키·마라톤·행/패러글라이딩·오리엔티어링 등 5개 대회(산림청장배)

□ (숲길) 쾌적·안전한 숲길을 만들고, '숲길 비즈니스' 를 창출

○ 숲길네트워크·등산로*를 정비하고, 올바른 산행**을 지원

* 전국 5대 트레일·5대 둘레길 연차별 구축 및 주요 등산로 정비(1,364km)

* 국립등산학교 설계착공 및 산림항공본부·산악구조협회 합동 산악사고 대응

○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사업' 에 따라 전국 숲길 DB를 개방*

하여 숲길 이용객을 위한 「코리아모빌리티」**를 구현

☞ 산림공공데이터의 비즈니스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

* 산 정보 : 100% 개방 기원료 / 등산로 정보 : 21,000km(64%) → 33,000km(100%)

** 난이도·소요시간·날씨 등 다양한 조건별 최적 숲길정보 모바일 제공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모빌리티' 가동('08) 후, 트레킹 인구 매년 15% 증가)

→ 주변지도·교통·숙박·식당 정보 등 접목 시 지역방문 및 소비촉진으로 연계

③

고령화 시대의 현명한 대안, 산림치유

△ 고령화 속도 1위('14, 산업연구원) * 고령화 지수 4.0 : OECD 평균(1.6)의 2.5배

□ (산림치유) 숲을 ‘국민을 위한 열린 치유공간’ 으로 활용

○ 국립산림치유원·치유의숲 등 산림치유 인프라*를 확충

☞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 증진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 국립산림치유원('16.4 개원, 영주예천), 치유의숲 조성운영 확대(35 → 41개소)

△ 국민의 11.7%인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지출('14) : 9.2조원/년(전체의 36.6%)

△ 등산의 의료비 대체효과('09, 산림청) : 연 2.8조원(노인인구 건강보험지출의 30.4%)

○ 국가보건체계*와 연계하고, 수요자별 특화서비스**를 제공

☞ 산림치유지도사의 영역 확대 및 특성화된 산림치유 제공

*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기준에 산림치유지도사 포함

** 소외계층(다문화가정·새터민·요보호아동), 스트레스직군(시방역·소방·경찰) 등

□ (지역발전) 산림치유 인프라를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계

○ 치유의 숲 내 편의시설 최소화 및 숙박시설 조성 지양

☞ 인근 숙박·요식업소 등 방문·소비를 통한 지역발전 유도

* (장성 치유의 숲 사례) 연간 30만명 방문 → 인근 4개 마을 매출액 약 70억원

○ 인근마을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추진

☞ 산림치유 시설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방향 제시

④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수목장림

△ 국내 묘지 규모 : 약 10만ha(국토면적의 약 1%, 산지면적의 약 1.6%)

*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 묘지가 새롭게 발생

△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례 방법 : 1위 수목장 (15, 한국소비자원)

* 수목장 44%, 수목장-봉안당(묘) 조화 26%, 봉안당(묘) 21%, 매장 4% 등

□ (수목장림) 자연친화적 장묘문화를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 국립 수목장림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규 조성**을 지원

☞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 확충

* 국립 하늘숲추모원(양평)을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및 운영·관리 강화

** 국·공립 수목장림(서천, 보령) 조성 및 산림조합 수목장림 조성 지원

○ 사설 수목장림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수목장림에 대한 정부관리 강화 및 국민인식 제고

* 수목장림 TF(복지부전문가 합동) 운영 : 산림청의 관리감독기능 강화방안 마련

**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 지도층 참여유도, 임업 유공자 묘역 마련 등



수목장림 해외사례(독일)

- 일반묘지 내에도 나무무덤나무장 활성화
-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산림관리 추구



수목장림 국내사례(하늘숲 추모원)

- 나무에 작은 표식을 통해 추모목 표시
- 작은 돌·꽃 등을 활용한 주변 장식

3.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녹색공간 만들기

△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13)은 8.3㎡로 WHO 권고기준(9㎡)에 미달

* 주요 도시 비교 : 서울 4㎡, 파리 13㎡, 뉴욕 23㎡, 런던 27㎡

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숲 가꾸기

□ (도시녹화운동) 시민.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 전개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연계

☞ 시민.기업을 도시숲의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주인으로 인식

* 기업의 사회공헌규모 : 2조 6,708억원(전경련 발표, '14)

** 기업-지자체-정부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숲(500개소), 학교숲(9개교) 등 조성

○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국민의식 제고로 도시녹화운동의 참여율·만족도 향상

* 기부금품 운영관리가 가능한 기관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 확대(20→40개)

** 도시숲 사랑 캠페인(분기별), 기업대상 설명회(5개권역), 신문·방송홍보(연중)

□ (인프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인프라를 확충

○ 내 집·학교·회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나라꽃 무궁화' 심기를 추진*

☞ 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제고

* 도시숲(328ha), 학교숲(113개소), 무궁화동산(17개소) 조성 등

②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 (도로경관) 걷고 싶은 길, 쾌적한 도로경관을 창출

- 가로수로 외곽산림-도시녹지를 연결하는 녹색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

☞ 가로환경의 품격제고 및 지역 랜드마크 창출(가로수 자원화)

* 가로수 조성(325km, 166억원), 명품가로수길 조성(172km, 85억원)

- 주요도로변, 관광지·생활권 등 가시권 산림경관 개선*

☞ 지자체 협력을 통해 계절별·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조성

* '16년 복합산림경관숲 조성(10개소, 4.2억), 꽃피는 나무·야생화 등 식재

* 전국 도로변 산림경관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도로공사 협업)

□ (농산촌경관) 농산촌의 자연·역사에 맞는 경관을 창출

- 전통마을숲을 복원(37개소)하고, 산촌생태마을 가꾸기*를 추진

☞ 농·산촌의 산림문화 계승, 경관 개선 및 활력 증진

* 농촌클린운동 연계 : 마을별 디자인에 맞는 묘목지원, 산촌마을 환경정화, 꽃 나무심기·꽃동산 조성 등 추진(농식품부 협업)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담양)



전통마을숲(보은)

③

정원문화·산업 육성

□ (정원문화) 정원을 가꾸고 향유하는 정원문화 확산

○ 정원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정원박람회**에 진출

☞ 정원문화·산업에 관한 국민인식 및 국가위상 제고

* 코리아가든쇼('16.4 : 정원작품 중심), 정원산업디자인전('16.9 : 정원산업 중심)

** 터키정원박람회('16.4~10 : 국내 우수정원 전시·홍보, 해외 우수사례 공유)

○ 정원조성·관리, 시민가드너 과정 등 정원관련 교육 확대*

☞ 실용교육을 통한 정원의 생활화 유도 및 국민행복 증진

* 정원 교육기관 지정·운영 확대 : ('15) 4개 → ('16) 7개 기관

□ (정원산업) 국내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지방·민간정원* 조성·등록 및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 추진

☞ 아름다운 지역경관 창출 및 정원산업화 기반 마련

* 지방정원 조성(강원충남경북), 민간정원 등록(6개소, 관광휴양연계 6차산업화)

**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15~'17) : (예산) 70억원, (규모) 연면적1,650㎡



코리아 가든쇼



정원산업지원센터 조감도(순천)

□ (생활화) 산촌마을, 주택가 등 생활권 내 야생화 확산

-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등 일상 공간에 우리꽃 화단을 조성
 - ☞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생활 속 야생화 문화 창출

□ (관광자원화) 야생화를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

- ‘야생화 100대 명소’ (’ 15.10 선정)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마련
 - * 명소별 자원현황운영상황 전수조사, 인근 수목원·식물원과 관리협약 체결 등
- 전국의 야생화 군락지를 활용한 야생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개화시기·지리정보를 포함한 ‘대한민국 꽃길지도’ 를 제작·보급
 - ☞ 야생화에 대한 국민 관심도 제고 및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 기후대별 수목원·식물원의 개화시기에 맞추어 ‘야생화특별전시회’ 개최

□ (고부가가치화) 야생화 식품·문화상품 등 개발·산업화

- 동의보감·본초강목 등 고문헌과 향토지식을 활용한 기능성 물질 탐색·효과 분석 및 야생화 품종개발
 - ☞ BT기업·연구기관·화훼농가 등에 보급·산업화 유도
 - * (사례) 분홍질레꽃 신품종 ‘노을향기’ 개발(’15) → 보급산업화 추진(’16)
- 야생화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상품화 추진
 - * 야생화 세밀화꽃누르미(압화) 제작·보급, BH 사랑채 전시회 개최 등

전략과제 성과목표

- △ 과학적·신속한 산불진화 ☞ ‘3년 연속 대형산불 제로화’
- △ 산림헬기 안전관리 강화 ☞ ‘3년 연속 산림헬기 무사고’
- △ 취약지역 관리 강화 ☞ ‘3년 연속 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1. 건강한 산림생태계 만들기

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 (보호구역)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 확대*

☞ 산림부문 아이치 타겟** 및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강화

* 국립공원 내 가치가 높은 산림(한라산 구상나무·왕벚나무, 설악산 눈향나무·난쟁이붓꽃, 무등산 털조장나무 등)의 단계적 보호구역 지정 추진

** 아이치 타겟 : 2020년까지 육상면적의 17%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 산림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관리 체계를 정비

☞ 산림보호구역 공간정보 현행화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전국 실태조사 및 공간정보 DB화('16~'18), 지자체 보호구역 지정해제 매뉴얼 마련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종의 현지 내·외 보전을 강화*

☞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보전 및 자원화 기반 마련

* 지역생태숲 조성(5개소: 서식지 보전교육), 자생식물원(5개소: 종 보전연구전시)

□ (복원·관리) 핵심생태축을 중심으로 복원·관리를 강화

○ 백두대간·DMZ 일원 등 훼손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원*

☞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 백두대간 단절지 연결(지리산 정령치) 및 산불피해자폐군사시설 복원(46ha) 등

**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유엔 개발정상회의 시 채택, '15.9)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시스템을 개편*

☞ 중·장기적인 관리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16~'25),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관리체계 구축, 백두대간 보전·관리 협약제도 도입



백두대간 훼손지역(인제 구령덕봉, 복원 전)



백두대간 훼손지역(인제 구령덕봉, 복원 후)

②

산림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수목원 확충

□ (국가수목원) 산림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현지 외 보전기반 확충

○ 국가수목원을 확충하여 기후대별 국가수목원 네트워크 구축

☞ 기후대·식생권역별 식물자원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 (온대북부) 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준비('09~'15, 경북 봉화)

* (온대중남부) 중앙수목원 공사 착수('12~'20, 1,35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 (서부해안) 새만금수목원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17~'25, 1,705억원, 전북 새만금)

□ (사립수목원) 사립수목원의 경영개선 및 활성화 지원

○ 사립수목원·식물원에 대한 경영진단·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자체적인 경영진단이 어려운 사립수목원·식물원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개선방안 제시

○ 사립수목원·식물원을 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 확대*

☞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국가 수목원과의 협업체계 강화

* 생명자원관리기관(18개) 운영 : 국내외 유용식물자원 수집·증식 실시



백두대간수목원(준공현장)



중앙수목원(조감도)



새만금수목원(조감도)

③

무분별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 산림사법경찰 1인당 관할면적 과다 : 5,432ha(남산의 16배) → 효율적 관리 체계 필요

□ (사범) 불법 산림훼손 감시시스템과 업무조직을 개선

○ ICT기반의 훼손 의심지 적발* 및 사범전담조직 개편**

☞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단속기반 마련

* 항공사진 비교·판독을 통한 훼손 실태조사 : '16년 강원·울산·부산지역

** 산림사범 업무를 전담할 산림사범수사대 구성운영, 산림보호지원단(250명) 신설

○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산림보호·단속의 핵심주체*로 육성

☞ 부족한 현장단속 인력 확충으로 사범업무의 신속성 제고

* 사범경찰권 부여(법무부 협의), 사범수사 교육이수 강화, 처우개선 등

□ (인식) 올바른 산림보호·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산

○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지속 추진 및 기업·단체 홍보협력 확대

☞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 실천문화 정착 및 법 질서 확립



2. 대형 산불발생 막기

①

산불예방 체계 고도화

□ (예방)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과학적인 예방활동 추진

○ 빅데이터 분석 등 ICT 기반*의 체계적인 산불감시를 실시

☞ 한정된 산불감시 인력(2만2천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산불 빅데이터 분석 → 집중근무 : (남부) 1~4월 (중부) 2~4월 (북부) 3~4월

* 감시원 GPS 이동이력 분석 → 산불취약지 위주의 근무순찰지 조정·관리

* NFC 전자순찰함 제도 운영 → 감시시간·위치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

○ 산불위험도에 따른 입산관리*와 산불방지시설 적지적소 설치**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과적인 감시·관리체계 마련

* 등산로 개방·통제 정보 대국민 서비스(포털사이트·스마트폰 앱 활용)

**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17개소)·산불소화시설(18개소) 확충

□ (홍보·교육) 국민·기관과 함께하는 산불방지 태세 강화

○ 대국민 타깃별 홍보* 및 산불방지 인력 교육·훈련**을 강화

☞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전문가 확대·양성

* 지역·시간·연령대별 매체노출 정보분석 → 차별화된 홍보물 활용

** 전담기관 지정(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진화대감시원·영림단 등 교육훈련

②

신속·안전한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

□ (진화) 지상·항공진화 역량 강화로 대형산불 확산 방지

○ 기계화진화대* 운영 및 다양한 현장여건**에 맞는 진화역량 강화

☞ 기관별 지상진화 작업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사군구관리소별 1개팀 이상 운영, 기계화진화시스템 주2회 이상 반복훈련

** 도시지역·야간산불·험준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진화 시범사업 추진

○ 산림헬기* 및 유관기관 지원헬기**의 공동진화 실시

☞ 산불진화 골든타임 강화(산불발생 30분 이내 현장 도착)

* 산림헬기(45대) 전국 11개 격납고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 수시 이동 배치

** 소방(25대)·군헬기(16대) 표준운영절차 준수 및 임차헬기(54대) 진화 지원 등

□ (항공안전) 사고발생 없는 안전한 산불진화헬기 운영

○ 기관 간 장비·시설 공동활용(협업)* 및 야간진화 안전 강화**

☞ '3년 연속 산림헬기 사고 제로화' (' 13.5 안동 임하댐 사고 이후)

* 영상전송시스템 장착완료(소속기관·지자체 등 실시간 상황전파·공유), 합동 안전훈련(국방부·지자체), 모의비행훈련장치·이착륙장 공동 활용 등

** 야간산불진화에 필요한 승무원·지상준비 인력 교육, '17년 신규도입 대형 헬기(1대)에 야간진화장비(야간투시경·고정식물탱크) 구비

3. 산사태 없는 안전한 산림 만들기

①

선제적인 산사태 방지사업 추진

□ (예방·대응) 산사태취약지역을 사전에 발견·대비

○ 전국 단위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

☞ 산사태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

* 우려지역 실태조사('16년 5천개소) → '산사태 취약지정' 지정고시(현 18,555개소)

○ 현장예방단*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정비 조치

☞ 산사태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산사태 대응시스템 강화

* 현장예방단 88개단(352명) : 사방담배수로 관리, 거주민 대피체계 등 점검

□ (사방사업)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을 추진

○ 주택·도로변 등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사업을 우선 추진

☞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 사방담 825개소, 계류보전 575km)

○ 사방사업과 관련한 부처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및 농산촌 가뭄피해 대응력 제고**

* 국토부(도로변 66개소), 국방부(민북지역 9개소), 문화재청(문화재주변 6개소)

** 농업·산불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저사 겸용 사방담 조성(연간 100개소)

②

‘스마트 재해방지 시스템’ 구축

〈기존 산림재해 방지체계의 문제점〉

- △ (시스템) 산불산사태·병해충·항공 등 관리시스템이 별개로 분산·운영
- △ (데이터) 실시간 산악기상정보·사면이동정보 등 데이터가 거의 전무→ 재해 발생·확산 예측과 대비체계 구축에 한계
- △ (정보공유) 재해발생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지 못하거나, 기관 간 데이터 형식 차이로 전송·해석 지연 → 안전차·지자체 대처에 한계

□ (SPS) 스마트 재해방지 시스템(Smart Protection System)을 추진

- 분산된 재해시스템을 통합·공개*하고, 재해예측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산림재해 발생·확산에 대한 예측력 제고로 피해 최소화

- * '16까지 산불산사태항공시스템 통합완료 및 오픈 API를 통한 민간서비스 확대
- ** 산악기상정보(산악기상관측소)·사면이동정보(사면센서) 등 연차별 고도화



전략과제 성과목표

- △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 확대 ☞ 해외조림 면적 3만ha 확대
- △ 해외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 국내 발전업계 1만톤 원료 제공
- △ 개도국과 산림협력 강화 ☞ AFoCO 회원국 확대설립



1. 세계 산림자원 확보하기

①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지원 강화

△ 국산 목재 공급량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증가로 수입 확대 전망

- * 국산 목재 공급량 장기전망 : ('15) 534만^m → ('50) 1,200만^m
- * 국내 목재 수요량 장기전망 : ('15) 3,131만^m → ('50) 4,000만^m

□ (지원기반) 해외산림자원개발 민간투자 지원체계를 개선

○ 해외조림 투자기업 협회 설립* 및 산림협력센터** 설립 확대

☞ 기업 간 투자정보 공유 및 민간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16.상반기), ** 메콩강 산림협력센터 1개소 추가

□ (목재자원) 자원경쟁에 대비하여 해외목재자원을 확보

○ 용자지원 확대 등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조림 확대**를 통한 국내 장기·안정적 목재자원 수급 대응

* 사전환경조사(2.5억원) 및 용자지원 확대(250억원 → 290억원)

* 해외조림지 매수지원 강화(임령조림시기 규제 폐지, 바이오매스조림 추가)

** 해외조림(누계) : ('15) 39만 → ('16) 42.4만ha → ('17) 46만ha

○ 바이오매스 조림 시범사업 등 신규 수익 사업모델 제시

☞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바이오매스 연료공급*으로 국내 친환경 에너지원 수급에 기여

* 시범조림지 200ha 별채 → 국내발전사 1만톤 도입(30MW 발전소 원료의 5%)

○ 해외산림인턴의 교육기관 변경 및 교육기간 확대*

☞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로 인턴의 전문성 향상, 현지적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

* 교육 전문성 제고 : (기존) 녹색사업단 3일 → (변경) 산림교육원 10일



인도네시아 해외조림사업지 전경



베트남 아카시아 조림목 벌채

②

양자협력국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중국의 경제성장과 자원보유국의 통제강화로 자원확보경쟁 심화

* '13년 중국은 미국 목재수출량의 50%, 캐나다 목재수출량의 21%를 수입

△ 국외 산림자원 확보 및 산업확대를 위해 양자협력국과의 유대 강화 필요

□ (협력확대) 산림협력을 확대 및 협력분야 다각화

○ 기관 간 약정 체결*을 확대하고, 산림복지·생물다양성 등 분야별 특성화 협력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및 산림자원 개발 대상국 확대

* MOU 체결확대(중남미개발은행(CAF)·피지 등), 산하기관단체 간 MOU 중재

** 필리핀(양묘장 조성), 베트남(우호의숲), 도미니카공화국(산림휴양) 등

□ (내실화) 협력국별 맞춤형 관리·대응 및 성과 내실화

○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 및 ‘양자협력발전협의회’ **를 운영

☞ 양국 민간기관 협력 및 해외투자 기업 문제해결 지원

* 산림협력위원회(18개국), 양자협력발전협의회(해외산림개발협회·전문가 합동)



한-중 산림복지 MOU



한-캐나다 산림협력 MOU

2. 지구촌 산림자원 함께 가꾸기

① 산림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

△ 산림복원 기술경험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는 역할수행 필요

□ (개도국 지원) 정상합의를 이행하고, 국제기구 확대 설립

○ 정상 간 산림분야 합의의제에 관한 협력사업을 가속화*

* 한-카자흐스탄(우호의 숲 설계공사), 한-캐나다(목조건축, 산불기술교류), 한-인도네시아(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공사, 역량강화 교육 등)

○ ‘한-아세안산림협력협정’ 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로 확대 설립

* 협정 만료('16.8) 이전까지 범아시아 14개국의 서명·비준 절차 진행 독려

□ (지구녹화선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개도국 녹화 지원

○ 건조지녹화사업* 확대 및 몽골·중국 사막화 방지 조림** 추진

* '12년 아프리카 3개국 → '16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 동북아 11개국

** 한-몽 그린벨트 후속사업 계획 수립, 중국 사막화방지 조림 지속 추진



인니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 조감도



사막화방지 조림(중국)

②

국제 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경제 성장과 산림 복원을 달성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기구 협력을 추진하고,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

□ (국제회의) 산림분야 국제회의 유치와 후속조치를 추진

○ FAO 주관의 제15차 세계산림총회(2021) 유치*를 통해 산림 복원 결과를 홍보하고, 다양한 산림정책 체험 기회를 제공

☞ 국내 산림복원 사례 및 정책에 대한 국제적 인식 확산

* 제23차 FAO 산림위원회(16.7)에서 유치 제안서 발표 후, FAO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제6차 세계산불총회(' 15.10, 평창) 개최 후속조치를 이행*

* 아시아 산불훈련프로그램 운영 지원, 산불관련 국제 공동대응기술교류 추진 등

□ (국제기구협력) 산림분야 관련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

○ UN환경 협약 및 다자기구와의 산림복원 이행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여타 선진국의 참여** 확대 촉구

☞ 우리나라 주도 산림복원 이니셔티브의 영향력 제고

* 산림복원 이행사업 : 창원이니셔티브(UNCCD), 산림복원메커니즘(FAO),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CBD) 등 3개

** FAO 사업에 스웨덴이 참여 중이며, 향후 독일·프랑스 등 참여가 예상

3. 산림을 디딤돌로 통일에 다가서기

①

북한 산림복구 내부역량 강화

- (지원기반)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북한의 긴급지원에 대비한 대북용 종자확보* 및 양묘장** 조성
 - ☞ 북한 황폐산림 복구에 부족한 종자·묘목지원체계 마련
 - * 종자확보계획(누계) : ('15) 20톤 → ('17) 30톤 → ('19) 40톤 → ('21) 50톤
 - ** 북한과 연접한 강원도 고성 국유지(3ha)에 '17년까지 20억원 투입
 - 민간단체의 종자·묘목 지원근거* 마련 및 전문가 Pool 구성
 - ☞ 남북관계 전개에 대비한 탄력적 민간 활용체계 구축
 - * 북한 황폐산림 복구를 위한 종자 및 묘목의 무상양여 기준 마련
- (복구체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복구 세부실행방안 마련
 - 북한 황폐산림 모니터링* 및 산림정보 DB** 구축
 - ☞ 북한 산림황폐지 정보 수집을 통해 체계적 복구방안 마련
 - * 모니터링 : ('99) 전체 → ('08) 전체 → ('13) 5개 → ('14) 11개 → ('15) 전체 지역
 - ** 산림자원 DB 구축, 사방조림혼농임업 적지 및 복구방법, 비용 등 분석('16~'19)
 - 모니터링을 토대로 북한 황폐산림 복구 세부실행방안 마련
 - ☞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인 복구태세 완비

②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작은 통일 구현

□ (민·관협력) 실행가능한 소규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 통일부 기금을 활용한 산림분야 민간단체 공모사업* 확대

☞ 단순 물품지원이 아닌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할 기회 마련

* 종자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병해충 방제, 임농복합경영(4개단체, 21.5억원)

○ 남북간 종자교류* 및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 북한의 요구사업으로 교류협력의 지속 및 확대 가능

* 북한의 자생수종 수급상황에 따라 제3차 종자교류 추진('15년 8톤 지원)

** '16. 3~5월 1차 방제지역(800ha) 모니터링 및 솔잎혹파리 1,000ha 방제 지원

□ (국제협력) 안정적 대북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활용

○ FAO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사업* 지속 추진('09~'16)

* A/R CDM, REDD+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임농복합경영 등(15억원)

○ FAO, WFP(World Food Programme : 세계식량계획) 등과 협력하여 패키지형 신규사업* 개발·추진

* 산림복구(조람양묘장병해충방제)와 식량난 해결(임농복합경영)을 복합적으로 설계

□ (과학자 교류) 남북한 산림과학기술분야 교류 확대

○ 남북한 산림과학자간 학술회의* 정례화를 통해 기술 등 전수

* 남북한 산림(임업)용어 정리 및 사전발간 등 산림과학기술 정보 교류

6

정책추진 기반확보

①

산림분야 규제개혁

- (규제정비) 산지의 합리적 이용, 기업부담 및 국민불편 해소
 - 불합리한 산지이용 제한 및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검토·정비
 - ☞ 석재산업 육성 및 보호구역 내 합리적 이용 활성화
 - * 지하채굴의 계단식 채굴의무 완화, 산림보호구역내 임산물 채취 확대 등
 - 목재분야의 과도한 인증제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통합하고,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산림사업의 개방 확대
 - ☞ 분산된 인증 획득을 위한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완화 및 산림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 * 목재제품 품질검사 자기적합성 선언제도로 전환 / 목재제품 품질인증과 KS를 통합
 - * 숲길 조성·관리사업 등 산림사업에 조경분야 참여기회 확대
 - 작지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형 규제를 발굴·정비
 - * 사실상 묘지주변 임의벌채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납부 등
- (사후관리) 기 개선된 과제 A/S 및 국민체감도 제고
 - 기 개선하였으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찾아 추가 개선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여 대응책을 마련
 -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국에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를 설치·운영(27개소)

②

비정상의 정상화

- (부산물) 산지 내 버려지던 부산물을 산업원료로 수집·활용
 - 산림사업 후 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던 원목, 가지 등 산림 부산물(연 350만m³)의 목재산업계에너지 업계 원료화 추진
 - ☞ 산림자원낭비의 적폐 해소 및 국내 목재자급률 제고

③

부처 간 협업

- (개발사업) 각종 개발사업장 내 발생임목 재활용(국토부)
 - 개발사업 시 발생임목(연 144만톤)을 폐기물로 처리(기존방식) 하지 않고, 목재산업계에 원료로 제공(공개매각 시스템 개발)
 - ☞ 폐기물처리 예산 절감 및 원목수입 대체효과 등 기대
- (산사태) 관리소관이 상이한 산지 내 산사태 예방(국토부·국방부)
 - 도로변·민북지역 내 산사태 예방사업 및 실태조사 추진
 - ☞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및 운전자·군인 등의 산사태 피해 방지
- (산지축산) 친환경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농식품부)
 - 요존 국유림 내 가축방목 허용, 밤나무 재배지를 활용한 산지양계 모델개발 지속 추진(품목 확대·경제성 분석 등)
 - ☞ AI·구제역 등 가축질병 저항력 제고 및 농림업인 소득 증대

□ (서비스 정부)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임업인·국민 대상으로 ICT를 융합한 국민 맞춤 산림서비스 제공
 - * 산림재해통합시스템, 산림주제도 서비스, 자연휴양림 빅데이터 활용 등
- 소외계층에 산림서비스 선제적 제공 및 산촌주민 고령자 불편해소
 -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산림패트롤 운영, 생활권 수목진료 서비스
- 민간의 창의성을 산림행정에 접목 (국민디자인단 과제 확대 : 1 → 5개)

□ (유능한 정부) 지식기반의 과학적·선제적 행정 구현

- 산림지식 범정부 공유 환경 강화 및 모바일 행정 확산
 - * 산림지식의 클라우드 이관, 산림조사 대장·항공사진 등의 모바일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과 산림공간정보 공동활용 체계 개편
 - * 국가산림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이용 체계 일원화

□ (투명한 정부) 고수요·고가치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 등산로·숲길·국가생물종 DB* 활용 민간사업화 지원 및 개방 확대**
 - * '15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10대 과제) 선정 ** '16년 9개 DB 추가 개방
- 개방데이터 순환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활용도 제고
 - * 민간 주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산림청이 재가공하여 민간 제공

⑤

4대 부문 구조개혁

□ (노동개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

○ 산림분야 2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16년부터 전면 시행

☞ 청년고용 기회 확대 및 계층간 상생고용 문화 정착

* 한국임업진흥원('15.8.27), 녹색사업단('15.10.21) 노사합의 도출 및 규정변경 완료

□ (공공개혁: 공공기관) 공공기관 기능조정 선제적으로 대응

○ 산림분야 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의 해체·기능이관 결정('15.5)

☞ 공공기관 기능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 문제 해소

* 「산림자원법」, 「임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계류 중

□ (공공개혁: 재정)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혁에 동참

○ (보조금) 산림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5)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및 운영 규정」 마련, 산림분야 보조사업 DB 구축
→ ('16) '산림보조금 관리시스템' 마련 및 농식품부 연계 추진(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

○ (재정정보공개) 세입·세출 운용상황 홈페이지 공개 실시

* 기재부 '열린재정' : 국고보조사업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 등

○ (지출효율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집행계획 수립·시행

* 실적점검(매월) : 예산집행 심의회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 '16년부터 재정운영 효율화의 가시적 성과 제고

IV. 주요 정책 현안

1. 산림병해충 방제

2. 봄철 산불방지

1. 산림병해충 방제

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추진실적) 지난 5월 이후 발생한 피해 고사목 81만본 중 32만본(40%) 방제(' 15.12 현재)
 - ' 13년 이후 급증한 재선충병 피해를 감소 추세로 전환
 - * 피해본수(만본) : ('07.4) 137 → ('11.4) 26 → ('14.4) 218 → ('15.4) 174 → ('15.12) 81
 - 감염목 벌채에서 감염우려목까지 전량벌채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국 840개 방제사업장의 철저한 관리로 방제품질 향상
 - * 정부·시민단체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 총 1,697회 현장점검
 - 항공·지상방제 확대(82→115천ha)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 전국 소나무류 유통·취급업체(4천개) 일제점검 실시(경찰청 합동)
 - 항공·지상예찰 강화로 신규 피해지 조기발견 및 선제 대응
 - * 5개 신규 발생지는 피해목이 10본 미만으로 초기대응에 성공
- (기반정비) 재선충병 특별법 개정(' 15.6)으로 방제기능 강화
 - 국가의 방제역할 확대, 제도 개선 및 확산우려지 관리 강화
 - * 문화재 등 중요지역 국가 직접방제, 부실업체 벌칙 강화, 일시 이동중지 등
 - 방제지침 제정 및 ' 16년 764억원 예산 확보(' 15 대비 16%증)

□ ('16.4까지 완료)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방제품질 향상

○ (피해목 방제) '16.4월*까지 2~3차에 걸쳐 반복 방제 실행

☞ 방제 누락목 미발생으로 피해 안정화 체계 구축

* 방제완료 기한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3월, 제주도 4월

○ (품질관리) 권역별 방제 전략 수립 및 책임방제* 강화

☞ 피해유형·방제여건을 감안한 종합적 방제로 재발생률 최소화

* 방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별 책임방제구역 설정

□ (연중 추진) 피해목 활용도 제고 및 예찰·모니터링 강화

○ (피해목 활용) 피해목 처리방식을 개선(훈증 → 수집·활용) 하여 재활용률*을 50%까지 확대

☞ 대량방제시설 3개소**를 거점으로 高부가가치 목제품 생산

* 재활용률 : ('13) 18.8% → ('14) 19% → ('15) 37% → ('16) 50%

** 피해가 극심한 제주, 경북 포항, 경남 밀양에 설치(1일 600그루 처리)

○ (인위적 확산방지) 선제적 단속 및 이력관리(QR코드*) 강화

☞ 취급업체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소나무류 이동을 DB화하여 이동통제 및 단속에 효율적으로 활용

○ (모니터링) 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운영, 재발생률 조사 등 체계적인 전국단위 예찰·모니터링 실시

☞ 피해목 조기 발견 및 차년도 방제전략 수립 지원

②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 (참나무시들음병) 사전예방 및 완전방제로 우량 참나무림 보호

○ 사전예방 사업 확대와 신규 방제기술 개발을 통한 확산 저지

☞ 매개충 포획 등 예방효과가 탁월한 방제사업 확대

* 끈끈이롤트랩 확대(만본) : ('13) 28 → ('14) 29 → ('15) 29 → ('16) 38

○ 중점관리지역 설정 후 정밀예찰 및 공동방제 추진

☞ 국립공원, 등산로 등 지역별 중점관리지역 집중 방제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방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공동방제(협의체 운영)

□ (솔잎혹파리)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산림경관 보존

○ 경기장 주변 및 고속도로변 등 가시권지역 집중방제 실시

☞ 저독성 약제를 활용한 나무주사로 친환경 이미지 구현

○ 지역별 적기방제(우화최성기)에 따른 방제효과 제고

☞ GIS기반 우화시기 예측모델에 따른 적기 나무주사 실시



참나무시들음병 사전예방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 봄철 산불방지

① 금년도 봄철 산불 전망

- 따뜻한 날씨와 재선충병 방제로 산불 대응여건은 불리
 - 1월부터 따뜻한 날씨와 높은 기온이 예상되어(기상청 장기예보) 산불위험이 높고, 재선충병 방제로 현장 대응역량 분산 우려

②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전국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사전대비 철저
 - 산불감시인력(2만2천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316개)하여 위험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
 - 인화물질을 사전제거하고, 소각금지기간을 철저히 운영(3~4월)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신속한 초동진화 실시
 - 유관기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및 119로 신고 접수되는 임야 화재 정보의 실시간 연계로 산불피해 최소화
 - *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 산불위험예보, 산불신고 단말기 및 어플리케이션, 감시카메라, 등산로 개방·폐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산림헬기(45대), 인력 진화대(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만명, 기계화 진화대 193대) 등 보유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초동진화력 제고

참 고 자 료

〈참고1〉 2016년 입법 추진계획

〈참고2〉 2016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참고3〉 2016년 분기별 추진계획

〈참고4〉 기관 일반현황

〈참고1〉 2016년 입법 추진계획

□ 입법 추진계획 : 총 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산림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을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으로 통합	○법제처 제출 : ' 16. 4월 ○국회제출 : ' 16. 6월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17. 1월)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목재 제품명인 인정제도로 통합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제도 부처 통합 운영 ○목재제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도입 ○지역간별재 인증 유효기간 폐지	○법제처 제출 : ' 16. 4월 ○국회제출 : ' 16. 6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17. 7월)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제도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제도로 전환	○법제처 제출 : ' 16. 4월 ○국회제출 : ' 16. 6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17. 7월)
4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 등의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근거 법률 개정(청원산림보호직원 직무 : 임업서기 → 임업공무원)	○법제처 제출 : ' 16. 7월 ○국회제출 : ' 16. 8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17. 7월)

〈참고2〉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연번	제목	주요 변경사항	제도(시행일)
1	산림복지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해설, 산림치유 등의 제공 목적의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단체는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운영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바우처를 발급·사용 ○ 산림복지서비스 인증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복지시설의 시설·전문가서비스 등에 대한 인증 ○ 산림복지단지 조성 	산림복지법 (' 16. 3월)
2	숲속야영장·레포츠 시설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전산지 내 설치 불가 → (변경)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휴양법」에 따른 종류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휴양법 (' 16. 1월)
3	벌채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베기 최대면적 축소 : 50ha → 20ha ○ 존치방법 개선 : 단목군상·수림대 → 군상·수림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 16. 1월)
4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단속 품목 확대 : 8개 → 14개 ○ 목재·제지분야 KS 인증제품 시판품 조사 및 현장조사 권한 : 산업부 → 산림청 ○ 목재·제지분야 KS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이용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16. 1월)
5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시 거주자 중 연료비 절감가능한 자 - (변경)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모든 자 ○ 지원제외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부정수급자(5년 간 참여 제한) 	산림자원법 (' 16. 1월)
6	산림사업종합 자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금 이자율 '변동금리' 적용 <신설> ○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 지원 규정 추가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 16. 1월)
7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료 산정방식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한 금액 - (변경) '최근 공시한 해당 권역의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과 '기존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 	국유림법 시행령 (' 16. 6월)
8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불가 - (변경) 국·공립(10ha미만) 및 사설(3ha미만) 수목장림 설치 허용 *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구역(1·2종) 대상 	산림보호법 시행령 (' 16. 1월)

〈참고3〉 2016년 분기별 추진계획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	1~4월
	■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실시	1월
	■ 봄철 나무심기 착수	2월
	■ 2016년도 목재수급계획 수립	2월
	■ 산림보호지원단 구성	2월
	■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 수립	2월
	■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5월
	■ 산림복지진흥법 시행	3월
	■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3월
	■ 산림분야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3월~4월
	■ 내 나무 갖기 캠페인 추진	3~4월
	■ 소나무류 이동 전국 일제 특별단속 실시	3~4월
2분기	■ 제71회 식목일 기념행사	4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원	4월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4월
	■ 지리산 둘레길 한바퀴 걷기행사 개최	5월, 10월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5월
	■ 아스타나 우호의 숲 착수식	5월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 및 지상방제 실시	5~10월
	■ 국유림 무단점유 집중 단속기간 운영	6월
	■ 임업인과의 만남(컨설팅) 행사 개최	6월
	■ 제1차 한-도미니카공화국 산림협력위원회	6월
	■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착공	6월
	■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	6~9월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6~8월	

구분	실천과제	세부일정
3분기	■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캠페인 전개	7월
	■ 2017년 산림소득사업 공모 실시	7월
	■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실시	7월
	■ 제23차 FAO 산림위원회 참석(WFC 유치 제안 프리젠테이션)	7월
	■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 운영	7~8월
	■ 태풍 대비 산사태 예방·대응 긴급대책 수립·시행	7~9월
	■ 제26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8월
	■ REDD+ 고위급 회의 개최(라오스 MOU 체결)	8월
	■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9월
	■ 생활정원 공모전 개최	9월
	■ 정원산업 디자인전 개최	9~10월
	■ 전국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조사 실시	9~11월
4분기	■ 목혼식 페스티벌 개최	10월
	■ 제1차 AFoCO 총회	10월
	■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10월
	■ 백두대간 사랑운동 추진	10월
	■ 제15회 산의 날 행사 및 제9회 산림박람회 개최	10월
	■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고시	10월
	■ 숲가꾸기 기간 행사	11월
	■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 실시	11월
	■ 2017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시행계획 수립	11월
	■ 제1차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11월
	■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창립 총회	11월
	■ 백두대간 정령치 생태축 복원사업 준공식	11월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11월
	■ 2016년도 목재산업 박람회 및 목재의 날 행사 개최	12월
	■ 종묘가격 결정·고시	12월
	■ AFoCO 교육훈련센터 준공	12월
■ FERI 글로벌 고위급 회담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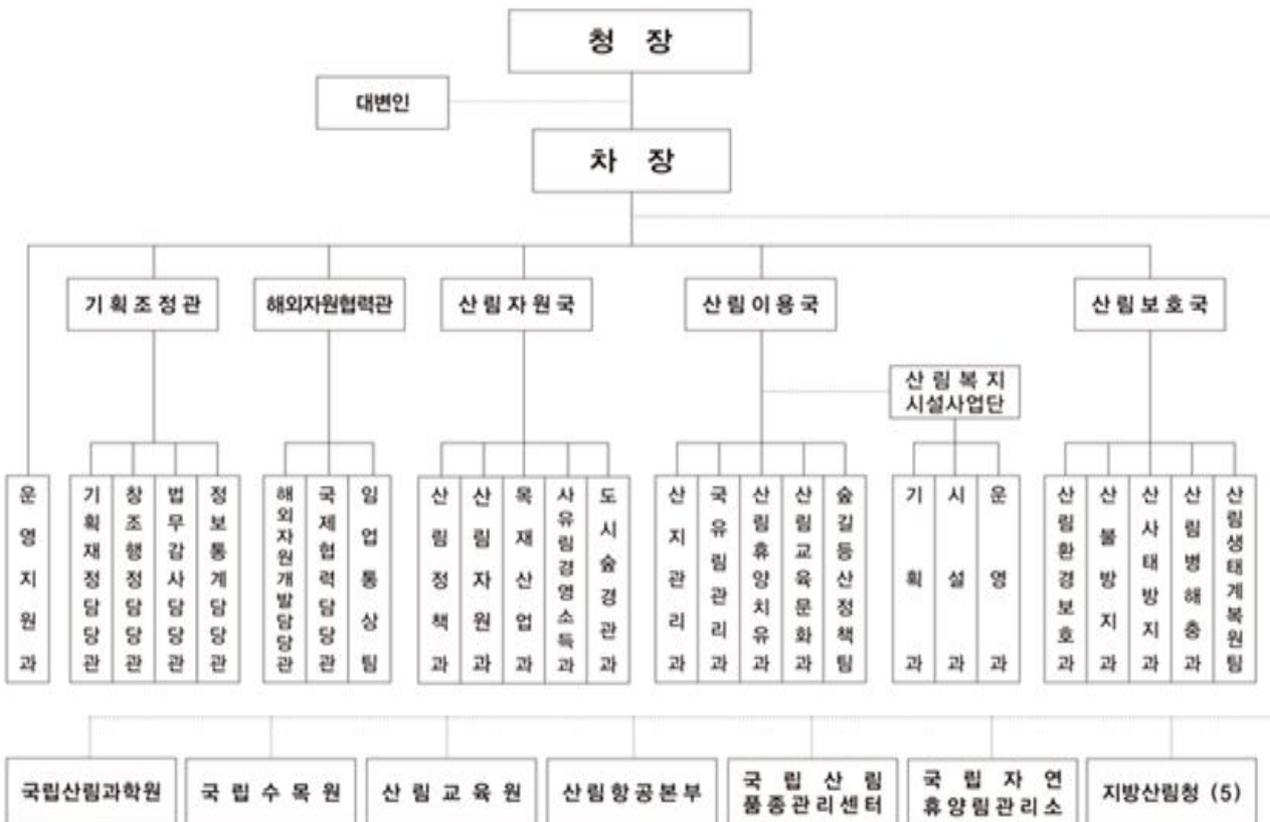
〈참고4〉 기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 임 무 : 산림자원 · 산업 육성, 산림보호, 산림이용 · 복지

□ 조 직 : 2관 3국 1단 24과 3팀, 11개 소속기관

- 본 청 : 기획조정관,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 산림이용국, 산림보호국, 산림복지시설사업단
-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5)



□ 정 원 : 1,751명 [본청 279, 소속기관 1,472]

2

주요 업무

□ 본 청

구 분	주 요 업 무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국회, 예산 및 재정성과, 행정혁신, 조직 및 정원관리, 성과평가, 감사, 법령심사, 산림통계, 산림행정 정보화
해외자원협력관	해외산림자원개발, 임산물 수출입·관세 정책, ODA, 임업분야 통상, 국제기구·협약 협상, 양자·다자협력, AFoCO 지원
산림자원국	산림정책·연구조정, 기후변화·산림탄소, 남북산림협력, 일자리 창출, 종묘·조림·숲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목재수급,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임업기계, 임업기능인 양성, 임도, 도시숲 조성·관리, 무궁화 보급, 임산물 수급, 임업인 소득 증대, 임업인 육성, 산림경영지도, 산림조합 육성
산림이용국	산지관리, 국유림 경영·관리, 산림복지·휴양 증진, 치유·산촌, 산림교육·문화, 숲길조성, 등산지원
산림복지시설사업단	백두대간·중앙수목원 및 산림치유단지 조성, 전시·체험·연구시설 운영
산림보호국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산림보호·단속, 백두대간 보호·관리, 산림생태계 복원, 산불방지, 사방사업, 산사태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 소속기관

구 분	주 요 업 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 지식·기술 연구 개발
국립수목원	산림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증식, 광릉숲 보전
산림교육원	산림분야 공무원·임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산림항공본부	헬기에 의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구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물 신품종 출원심사 및 권리보호, 종자 및 유전자원 관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운영 및 관리
지방산림청	국유림 경영 및 관리, 국유림 확대 및 이용, 산불예방·진화 지원

3

소관법률 (총 19개 법률)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 사방사업법	1962. 1.15	○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1963. 2. 9	○ 산림피해 방지와 보호를 위한 청원산림 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법	1980. 1. 4	○ 산림 소유자와 경영자의 권익단체인 산림조합에 관한 사항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997. 4.10	○ 임업 및 산촌의 진흥과 임업인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1. 3.28	○ 수목원·정원의 조성·육성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기본법	2001. 5.24	○ 산림과 임업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 산지관리법	2002.12.30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03.12.31	○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2005. 5.31	○ 재선충병으로 인한 피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및 산림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 8. 4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05. 8. 4	○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07. 8. 3	○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 산림보호법	2009. 6. 9	○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산불·산사태·산림병 해충 등 산림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 민통선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역주민 지원 사항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1. 7.25	○ 국가·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2012. 2.22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증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2012. 5.23	○ 목재이용 활성화·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2015. 3.27	○ 산림복지단체의 조성·운영 및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2016년도 예산

□ 회 계 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
계	19,484	19,841	357	1.8
○ 일 반 회 계	9,791	10,006	215	2.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936	6,171	235	4.0
○ 지역발전특별회계	3,305	3,195	△110	△3.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52	469	17	3.8

※ 2016년 예산(총지출기준) : 정부예산 대비 0.51%, 농림예산 대비 10.0% 수준

□ 분 야 별

(단위 : 억원)

부 문 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예산	%	예산	%		%
계	19,484	100	19,841	100	357	1.8
○ 산림자원육성·관리	5,811	29.8	5,639	28.4	△172	△3.0
○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1,875	9.6	2,200	11.1	325	17.3
○ 산림복지서비스증진	2,673	13.7	2,728	13.8	55	2.1
○ 산림재해예방·대응	5,307	27.2	5,481	27.6	174	3.3
○ 산림생태계보전	938	4.8	847	4.3	△91	△9.7
○ 국제산림협력 및 R&D	1,061	5.5	1,036	5.2	△25	△2.4
○ 산림행정지원	1,819	9.4	1,910	9.6	91	5.0

□ 집 행 계 획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억원)	상반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계획	%
2016	17,242	10,397	60.3	5,242	30.4	5,155	29.9	3,431	19.9	3,414	19.8
2015	17,628	11,916	67.6	5,194	29.5	6,722	38.1	2,680	15.2	3,032	17.2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주요 사업비 기준 금액('15년은 실적)